

제2장 국가 중기재정운용 여건

1. 대·내외 경제 여건¹⁾

세계경제

□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교역량이 급감하고 인구 이동성이 크게 제약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 전망

※ '20년 세계 상품 교역량은 △13~△32% 감소 전망(WTO)

※ '20년 3월 항공여객운송실적은 전년동기비 △53% 감소하여 '06년 수준으로 회귀(IATA)

○ 주요국의 1/4분기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, 세계경제 '20년 성장률이 금융위기('09년 △0.1%) 이상 하락(△3.0%, IMF)할 전망

※ '20.1/4분기 성장률(전기비, %): (美)△1.2 (英)△2.0 (獨)△2.2 (中)△9.8 (韓)△1.4

↳'20/'21년 성장률 전망(IMF, %): △5.9/4.7 △6.5/4.0 △7.0/5.2 1.2/9.2 △1.2/3.4

국내경제

□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 중

○ 1/4분기 성장률이 내수침체로 글로벌 금융위기('08년 4/4분기 △3.3%) 이후 가장 부진한 △1.4% 기록

※ 1/4분기 성장기여도(계절조정 전기비, %):

(민간소비)△3.1 (정부소비)0.2 (투자) 0.9 / (서비스업 생산)△1.1%

○ 작년부터 회복세를 보였던 고용도 3월부터 큰 감소세로 전환되고, 수출도 4월부터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실물경제 피해 본격화

※ 취업자증가(전년비, 만명): ('18)9.7 ('19)30.4 ('20.1) 56.8 (2) 49.2 (3)△19.5 (4)△47.6

※ 수출증감률(전년비, %): ('20.1)△6.6 (2)3.6 (3)△1.4 (4)△25.1 (5.1~20.)△20.3

○ '20년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전망이며, 외환위기('98년 △5.1%)이래 처음으로 **역성장**할 것이라는 전망도 다수 존재

※ '20년 한국성장률 전망(%): (무디스)△0.5 (피치)△1.2 (S&P)△1.5 (KDI)0.2 (한경연)0.3

1) 2020년 국가재정운용방향(기획재정부, 5.28.)

2. 국가 재정운용 방향²⁾

재정운용 여건 및 기본방향

- (재정여건) 금년 경제회복 지연 등으로 내년도 세수 여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, 재정지출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
 - (세입)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경제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됨에 따라 내년도 세수 불확실성도 확대될 우려
 - (세출)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투자소요와 함께 코로나19이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지출소요도 추가될 전망
 - (재정건전성) 최근 재정수지 적자와 국가채무의 증가에 대응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노력 강화 필요
-
- (기본방향) 「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」와 함께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」 병행
 - (재정기준) 코로나19 이후 경제 역동성 회복과 혁신적 포용 성장의 체감성과 확산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견지
 - 과감한 재정혁신으로 신규 투자여력을 최대한 확보
 - (투자중점) 내수·수출·투자 활성화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최우선 과제에 중점 투자
 - 생계·교육·고용·주거 등 국민 삶과 밀접한 사회안전망 보강, 저소득·취약계층의 일자리 소득 확충 등으로 포용가치 확산 뒷받침
 - 감염병 등 사회재난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제규모에 걸맞은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안전 환경 국방 분야 핵심과제에 집중 투자
 - (재정혁신) 세출 전반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다부처 협업 예산 도입 등을 통한 재정운용시스템 혁신
 - 필수적 소요를 제외한 재량지출 10% 의무감축, 관행적 보조금·출연금 전면정비, 집행실적·성과부진사업의 과감한 예산 감축등 추진
 -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업군을 선정하여, 공동으로 사업기획 예산 요구하고 공동사업단 운영 등으로 사업집행·평가를 통합 관리

2)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(기획재정부)

재원배분 중점

□ 내수기반 확충과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 역동성 강화

- 자영업·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준비된 재창업 등 재기를 지원하고,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라인판로·스마트상점 등 新유통 인프라 지원
-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에 대응하여,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국내유턴, 신북방 신남방 수출시장 생산기지 개척 지원 확대
- 한류기반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, 지방공항을 거점으로 관광쇼핑 체험을 통합 연계하는 '코리아 도탈관광패키지' 도입
- 혁신에 기반한 지역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본격추진하고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지원
- 대도시 광역교통망 조기 구축, 노후 기반시설 개량, 생활SOC 및 스마트 교통 치안 상하수도 등 국민생활 밀착형 인프라 확충

□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혁신성장 가속화

- 바이오·미래차·시스템반도체·로봇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산업을 DNA(데이터·5G·AI) 기반 기술과 접목하여 고도화
- 혁신기술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 도약(scale-up)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R&D 사업화 자금 등 패키지 지원
- 공장 산단 스마트화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, 농어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 팜·양식 클러스터 조기 구축
-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 핵심품목의 조기 자립화를 위해 R&D·실증 인프라·양산자금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
- 혁신 기술·산업에 대한 도전적 R&D·모험자본 투자·정부조달을 확대하고, AI 등 신기술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·훈련 인프라 보강
- ICT 기반의 의료·교육·근로·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 지원

□ **촉촉한 사회안전망으로 포용가치 확산**

- 플랫폼 노동자·일용직 등 사각지대의 고용안전망을 보강하고, 청년·40대·여성 등 취업 애로계층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강화
- 기초생보 보장성 강화, 국민취업지원제도·고교무상교육 전면 실시, 맞춤형 임대주택 확대 등 생계·고용·교육·주거 4대 사회안전망 확충
- 장애인, 여성·가정폭력 피해자, 한부모·다문화가정, 노숙인 등 소외 계층에 대한 생계·돌봄·자립 지원을 맞춤형으로 개선
-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출산·주거·보육·일가정 양립지원 등 체감형 패키지 투자 확대
-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을 확대하고 노인 돌봄서비스 품질 개선, 노인 일자리 내실화 및 고령친화산업 육성
- 사회적 약자 보호, 기회균등, 공동체, 안전, 환경보호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투자 강화

□ **국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삶의 질 제고**

- 감염병 전문병원·인력 확충, 마스크 등 보건 비축물자 전략적 확보, 백신·치료제 R&D 확대 등 방역·치료 시스템 고도화
- 노후 경유차 감축 등 핵심 배출원별 미세먼지 저감 투자를 확대하고, 녹색 벤처기업 등 녹색산업 육성 추진
-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등 생활 주변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, 풍수해·화재 등 대형·복합 재난에 대한 현장 대응능력 제고
- 핵·WMD 대응 전력 강화를 위해 첨단무기체계 개발·도입, 가상·증강 현실 기반 훈련프로그램 확충 등 스마트 군 역량 제고
- 전략지역 대상 공공외교 및 신남방·신북방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ODA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사건·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 인프라 강화
- 평화통일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를 확산하고, 남북 협력사업 및 북한 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등에 중점 지원

3. 중기 지방재정 운용여건

수입 측면

① [총괄] 경제 불확실성으로 세수 증가세 둔화

- (총규모) '20년은 '코로나19' 발생에 따른 소비·투자 위축, 부동산 정책 등 세수 여건 악화, '21년까지도 여파 지속될 경우 수입 제약 불가피
 - 수입 증가세 둔화를 넘어 수입 자체가 감소하는 부정적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성
 - ※ 메르스 사태, 최초 발병일 '15. 5. 20., 종식일 12. 23.(약 7개월 지속)
- (자체재원) 지방소비세·재산세 증가 요인*이 있으나, 취득세·지방소득세는 부동산 규제·경기 위축 영향으로 증가세 둔화 전망
 - * 지방소비세율 인상(15%→21%),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
 - 대출 요건 강화 등 부동산 대책 영향에 따라 취득세 감소도 가능
- (이전재원) 국세수입 전망에 따라 지방교부세·국고보조금 규모 연동, '코로나19' 등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 확대로 증가세 둔화 예측
 - '21년을 기점으로 세계경제 회복과 이에 따른 세수 호조가 전망되었으나, 최근 발생한 '코로나19'의 여파에 따른 상황 변동 감안 필요

< '20년 지방재정 수입 여건(2020년 지방재정전략회의) >

□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국세 등 국가 총수입 감소

- ※ '20년 1~4월 누계 국세 수입은 109.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.7조원 감소
- '20년 내국세 감소에 따라 교부세 총액 또한 3.7%(1.95조원) 감소
- 부가가치세 세입경정으로 본예산 대비 지방소비세 감소(△1.1조원)

□ 법인지방소득세 감소(△1.3조원) 등으로 '20.4월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동월 대비 1.4조원 감소하는 등 자체 세입여건 또한 어려운 상황

② [재정분권]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지방세 비중 확대

- (총괄)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세입 여건 확충, 국세 대 지방세 비중 7:3 실현에 점진적 접근
- (1단계 재정분권 성과) 지방소비세율 '18년 11% → '20년 21%로 인상(10%p ↑), 지방세 비중은 '18년 22.3% → '20년 24.5%로 확대(2.2%p ↑)
 - ※ '18년 대비 연간 약 8.5조원의 재원이 지방으로 추가이전('18년 징수실적 기준 추계)
- (수도권-비수도권 안분) 10%p 인상분을 소비지수에 따라 배분하되, 지역별 가중치 적용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해 지역 간 격차 조정



- (2단계 재정분권 추진) 현재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을 논의 중이며, 구체적인 방안 합의 시 추가적인 지방세 확충 기대

③ [적립재원]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략적 활용 가능

- (여유재원 활용성 제고) 통합재정안정화기금*(「지방기금법」 제16조) 설치·운용을 통해, 특별회계·기금 여유재원 효과적 활용
 - ※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·신설('20.6.9.시행)
- 회계·기금 재원의 예수·예탁 또는 旣 적립된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경기 활성화·재난 대응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탄력적 대응 가능

지출 측면

① [총괄] 분야별·지역별 지출 수요 변화

- 인구 감소, 저출산·고령화, 농·어촌 청년 인구 유출 및 수도권 과밀화 등 구조 변화에 따라 분야별·지역별 지출 여건 상이
 - (분야별) 장기적인 인구 감소 추세로 교육·SOC 등 분야는 지출 수요 점진적 감소 가능성, 고령화로 인해 복지 부담은 증가
 - (지역별) 수도권은 인구 집중으로 전체적인 행정수요 증가, 군 단위는 복지 분야(고령화 요인) 외 타 분야 수요 감소 가능성

② [지역경제] 경기 회복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확대

- 미·중 무역분쟁에 따른 수출 부진 등 지역 경제에 불리한 여건이 지속되어온 가운데 최근 '코로나19'라는 부정적 요인 추가 발생
 - IMF·OECD 등 국제기구는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을 권고하면서,
 - 완화적 통화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 필요성 주문
 - 고용 감소, 소비 침체 등 지역 경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과감한 지출 확대가 필요한 시점
 - ※ (예) 일부 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움에 직면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생활비 지급 추진

③ [복지]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 필요성 증가

- 국가는 4대 핵심분야(고용·소득·건강·사회서비스) 보장을 확대할 계획*이며, 이에 따라 자치단체도 대응 지방비 매칭 부담 증가
 - *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(2019-2023), 보건복지부
- 노인 생계 지원·출산 장려·청년 정착 유도 등 저출산·고령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자체 복지사업 필요성도 증가